

'통합' 개혁신당 "위성정당 안 띄운다"

이낙연·이준석·이원욱·금태섭 등 제3지대 4개그룹 비공개 회동... "거대 양당 품수정치의 상징"

새로운미래·통합 전 개혁신당·원칙과상식·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통합' 개혁신당이 오는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을 띄우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처에서 열린 지도부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비공개 회의 도중 기자들과 가진 중간 브리핑에서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짜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거대 양당 품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3정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품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며 "이번에 설령 지지율이 20~3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제3지대 4개 세력 합당 선언 후 처음 열린 통합 지도부 회의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이 이날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머리발언에서 "날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이렇게 타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준석 대표께서도 큰 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통합 소식이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또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서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하게



이낙연(사진 왼쪽)·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식당에서 열린 1차 개혁신당 임시 지도부 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주요 당직자 인선안 발표... 공동 정책위의장 김용남·김만홍 사무총장 김철근·전략기획위원장 이훈·수석대변인 허은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통해 나머지 반을 채우는 과정 빨라야 나가야 된다"며 "우리 국민들 정말

새해 초부터 더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고 신당명을 '개혁신당'으로 정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이낙연·개혁신당 출신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다. 4개 그룹이 최고위원을 1명씩 추천하기로 했으며, 첫 최고위원회의는 13일 오전 9시 열린다.

한편, 개혁신당은 12일 김용남 전 의원과 김만홍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공동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등 주요 당직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김철근 전 실장이 지명됐다.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새로운미래 사무총장 출신인 이훈 전 의원이 선임됐다.

대변인단도 새롭게 구성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에 합류한 바 있는 허은아 전 의원이 수석대변인, 김효은 새로운미래 대변인과 이기인 개혁신당 경기도의원이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뉴시스

민주, 현역 하위 20% 설 연휴 후 발표

비명계 추가 탈당 이어지나

이르면 이번 주부터 대상자 31명에 대해 개별 통보 하위 10%는 최대 30% 감산... 컷오프 해당 불이익 비명계 규모 관건... 단체행동·연쇄탈당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비명계 의원들이 다수 공천에 탈락할 경우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위는 경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31명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는 경선 과정에서 얻은 득표수의 20%를, 하위 10%의 경우 득표수의 30%까지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위 10%는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에 가까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초 공천위는 설 연휴 전에 통보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반발을 고려해 통보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대상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내부 분위기가 크게 술렁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관위는 통보설을 공식 부인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공관위는 일단 발표 시점을 설 연휴로 못 박으면서 당내 풍요를 가리켰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6일 하위 20% 통보 일정에 대해 "구정 후가 될 것이며, 통보받는 분들이 충분히 이익을 제기하고 경선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기간

을 감안해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통보받는 분들이 탈당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 통보가 추가 탈당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증위 단계에서 탈락한 전병헌·유승희 전 의원이 탈당해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선언한 바 있다.

관건은 비명계 의원 포함 규모다. 31명 가운데 비명계 현역들이 다수일 경우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공천 갈등이 극도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현역들이 공천 과정에 불복해 연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와 달리 이들을 반길 제3지대 통합당인 개혁신당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계과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평가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부족한 개혁신당은 민주당 추가 탈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기호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위해 최대한 많은 현역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주시하면서 접촉하고 있다"며 "공천 과정이 진행되면서 제3지대 합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여야, 선거구 협상 막판 진통... "연휴 직후 본격 협의해야"

확정위 "전북·경기 부천 1석 줄여야" 민주, 강남·부산 등도 통합 포함 주장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인 21일을 앞두고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확정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이번에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

이 필요하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북과 경기 부천의 선거구가 1석씩 줄어드는 획정위 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북과 부천은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수를 고려해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갑·

을·병이나 대구 달서 등도 통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합구 가능 지역으로 주장한 곳은 창원(100만 8228명), 부산(329만 3362명), 서울 강남구(54만 9154명), 대구 달서구(52만 6576명) 등이다. 해당 지역 모두 인구 대비 지역구 수가 많은 곳으로 국민의힘 우세 이기도 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한 쪽을 늘려주려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되는

데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 민심도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며 "우리 선거구 획정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부산 인구가 330만명이고, 인천이 300만명인데 부산이 5석이 많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부산을 안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역구 인구수로 비교해보면 강남 인구가 (조정안에 해당하는 지역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연휴 중에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연휴 직후 정개특위 회의를 서둘러 개최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유성열 캠프, "선관위 심사 통과 공보물 허위 사실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유성열 예비후보(정읍·고창)의 선거 공보물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지역구인 윤준병 예비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선관위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가운데 유성열 예비후보 캠프는 이 공보물은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공보물로 어떠한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공보물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읍시와 고창군 그리고 의회의 자료와

정읍시와 고창군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해 연평균복합성장률(CAGR)로 계산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유 예비후보 캠프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을 뿐이며, 이에 대해 허위 비방 주장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예비후보 캠프에 엉뚱한 트집을 잡지 말고 공명정대한 선거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